모든 공무원 행정학

기출은 미래다
10년기출을 정제한
김중규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1 총론 / 정책
2 조직 / 인사
3 재무 / 환류 / 자치

김중규 저

커넥츠 공단기
gong.conects.com

지방자치법 등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을
빠짐없이 반영

큰 줄기를
이해하고
체계적 암기

2021 상반기 기출 등
최근 출제경향과
이론의 유행을
깊이있게 학습

2022
전정판

믿고 따르는 선행정학 입체 커리큘럼

STEP 1 행정학, 즐거운 시작

이론입문

행정학, 큰 숲 그리기

기출입문

대표기출(최빈출) 확인하기

STEP 2 이론 완성하기

이론심화

곁가지 붙이기, 이론완성

기출심화

고난도, 신경향 문제까지 완전 분석

STEP 3 기출문제 정복

기출분석

최근 10개년 기출 완벽 정제·분석,
기출패턴, 함정, 출제 포인트 등 분석

추가 Tip

응용문제, 신경향 출제 예상문제 분석

STEP 4 압축하기

핵심요약

여기서 다 나온다,
숲과 가지의 연결

OX 파이널

OX-지문으로 문제 해부,
이론과 문제의 연결

STEP 5 실전감각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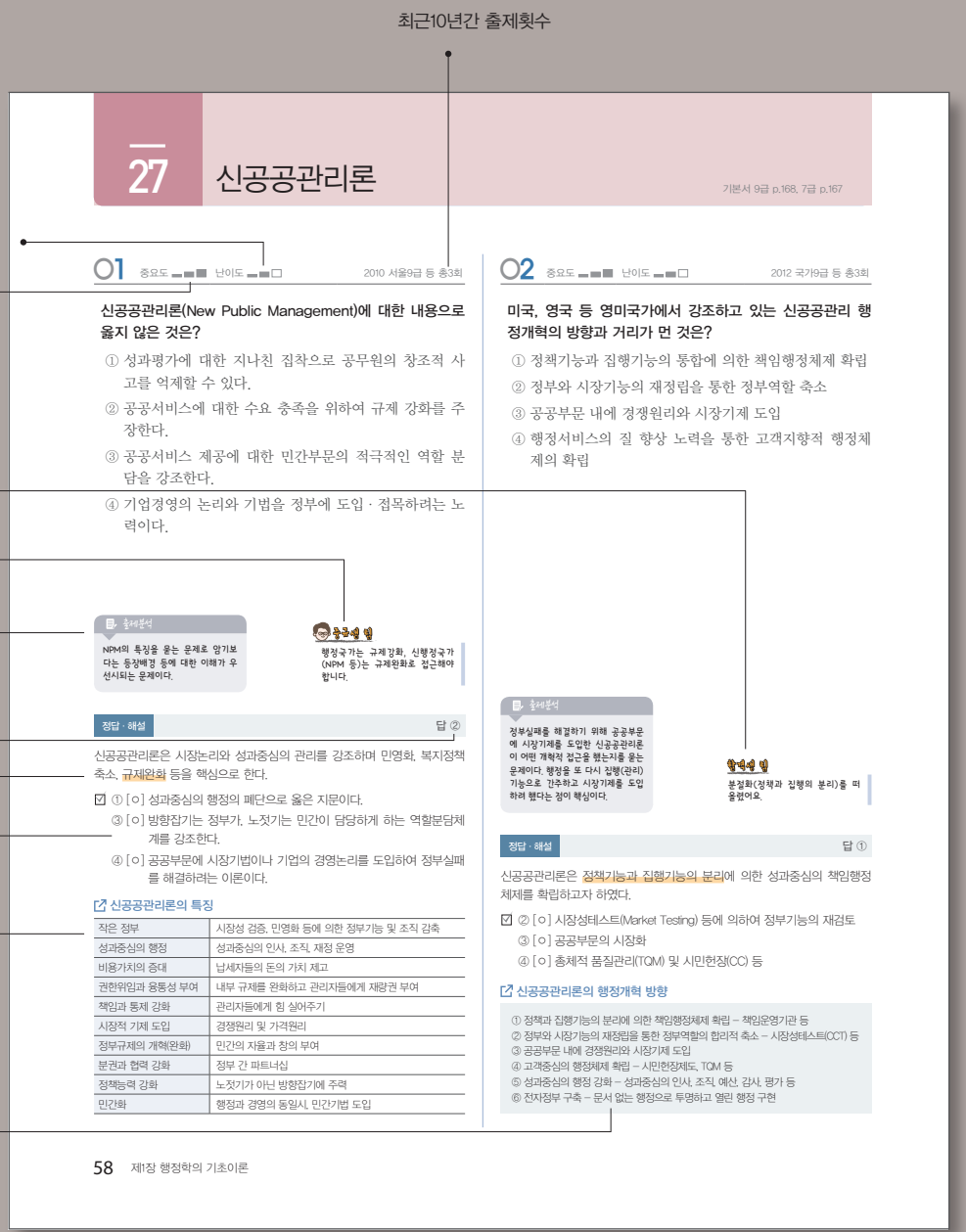
동형모고

시험에서 보게 될 문제를 미리 본다.
실전감각 익히기

헷총

헷갈리는 부분 완벽 정리,
30점 UP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커리

이 책의 페이지 구성과 특징



파트별 출제빈도 분석(최근10년)

F R E Q U E N C Y

장 (Chapter)	절 (Subject)	출제빈도 (10 20 30 40 50)	주요 출제 주제(Theme)	총 출제 횟수
Ch 01 행정학의 기초이론	01 행정의 본질		행정의 개념, 재화의 유형과 특성	502
	02 행정과 환경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사회적 자본	
	03 행정의 변천		행정의 변천, 현대행정의 특징, 후기산업사회의 특징	
	04 시장실패와 대응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정부규제	
	05 정부실패와 대응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민영화	
	06 행정의 지향과 가치		행정이념의 변천, 공익, 형평, 정의, 능률성, 합리성, 가외성	
	07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행정학의 성립 · 발달	
	08 행정학의 주요이론		행태론, 체제론,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Ch 02 정책론	01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정책수단, 정책의 유형	415
	02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문제의 구조화, 정책의제 설정모형,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정책네트워크 모형	
	03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체제분석, 직관적 예측, 델파이기법	
	04 정책결정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05 정책집행		정책집행이론	
	06 기획		기획	
	07 정책평가와 환류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정부업무평가, 정책평가의 요소, 실험	
Ch 03 조직론	01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조직의 유형	422
	02 조직행동론		인간관과 동기이론, 갈등, 리더십	
	03 조직구조론		조직의 구조변수, 관료제, 애드호크라시, 책임운영기관	
	04 조직환경론		거시조직이론, 혼돈이론	
	05 조직관리론		정보공개, 목표관리(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균형성과관리(BSC)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ONTENTS

제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19
02 행정의 특성 22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23
04 행정기능 & 행정과정 30

제2절 행정과 환경
01 행정의 정치 31
02 행정과 경영 34
03 행정과 법 37
04 시민사회와 제3섹터 · NGO 38
05 사회적 자본 41

제3절 행정의 변천
01 현대행정의 특징 46
02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50
03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52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01 시장실패 54
02 정부규제 57
03 행정지도 67

제5절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01 정부실패 68
02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73
03 감축관리론 – 작은 정부론 74
04 공공부문의 민간화 76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01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85
02 행정의 본질적 가치 87
03 행정의 수단적 가치 95
종합 행정이념 103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성격과 접근법 109
02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112

제8절 행정학의 주요 이론
01 과학적 관리론 116
02 인간관계론 118
03 행태론적 접근 120
04 생태론적 접근 124
05 체제론적 접근 125
06 비교행정론 128
07 발전행정론 129
08 신행정론 130
09 현상학 133
10 비판행정학과 담론이론 135
11 공공선택이론 136
12 신제도론 148
13 신공공관리론 158
14 거버넌스론 167
15 신공공서비스론 179
16 탈신공공관리론 186
종합 행정이론 187

제2장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1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205
02 정책의 본질과 유형 207
종합 정책유형 216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01 정책의제의 설정 222
02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232
03 정책네트워크(정책망)모형 246
04 정책목표 253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0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255
02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256
03 체제분석 257
04 관리과학 263
05 직관적(판단적) 예측 264
06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272

제4절 정책결정
01 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277

01 중요도 ▬▬□ 난이도 ▬▬□ 2009 서울9급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으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 · 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다.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꿀꿀샘 팁
행정은 정부 독점적 행위도 아니고,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④

행정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며,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활동이다.

☑ ① [ㅇ] 넓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의 공행정과 기업의 사행정이 모두 포함되는 보편적 개념이다.

② [ㅇ] 최근 행정은 정부에 의한 독점적 행정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③ [ㅇ] 협의의 행정은 전통적 개념으로 정부관료제에 의한 공행정만을 의미한다.

⑤ [ㅇ] 행정과 경영은 관리활동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행정은 공익을, 경영은 사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02 중요도 ▬▬□ 난이도 ▬▬□ 2015 지방9급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을 들 수 있다.

꿀꿀샘 팁
본질적 가치는 '공자형평정복'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④

능률성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며, 책임성도 민주성의 한 요소이므로 수단적 가치에 해당한다. 정의와 형평성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 ① [ㅇ]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② [ㅇ]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③ [ㅇ]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본질적 가치	공익, 형평, 정의, 자유, 복지, 평등
수단적 가치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가외성, 생산성, 신뢰성, 투명성 등

01 중요도 ■■□ 난이도 ■□□ 2009 국가7급 등 총3회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 Johnson 대통령의 Great Society Program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

① 시장기능의 강화
②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
③ 작지만 강한 행정부
④ 규제 완화와 행정의 민주화

정답 · 해설 답 ②

두 사건 모두 미국사회의 경제적 ·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로 경제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은 행정국가의 시작을 가져왔고,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행정국가의 절정을 이루었다(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 이러한 현상은 곧 정치행정일원론(행정국가)에 입각하여 정부의 경제 · 사회적 가치판단기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① [×] 현대행정국가는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③ [×] 신자유주의국가의 특징을 말한다. 행정국가는 크고 강한 정부이다.
④ [×] 행정국가는 정부규제가 강화되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02 중요도 ■■■ 난이도 ■■□ 2012 전환특채 등 총4회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②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the law of rising pyramid)이라고도 불린다.
③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④ 부하 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합격생 팁
중규쌤이 수업 때 "심리적 요인"이라고 외쳐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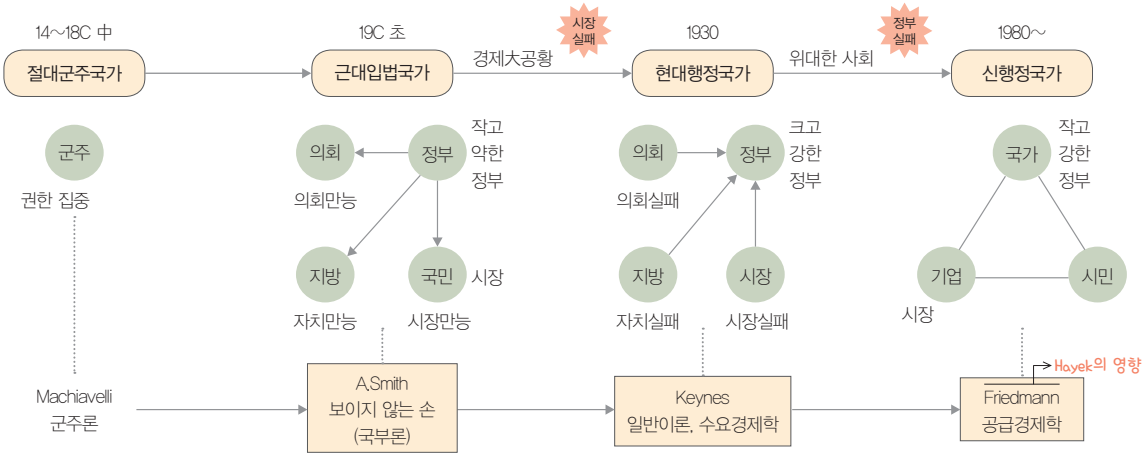
정답 · 해설 답 ①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①의 경우 구조적 특징이 아닌 심리적 요인(부하 배증 및 업무배증)이라야 맞다.

☑ ② [○] 부하가 늘어남으로써 계층제의 높이가 계속 상승
③ [○] 해군 함정수가 줄어드는데도 직원 수는 매년 5.75%씩 증가
④ [○] 부하배증의 법칙(→ 동료보다는 부하를 증원)과 업무배증의 법칙(→ 본질적 업무보다는 파생적 업무가 증가)이 상호작용

Parkinson의 법칙

(1) 의의: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늘어난다는 법칙.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관료제국주의
(2) 하위법칙: 두 가지 법칙이 상호작용
① 부하배증의 법칙: 경쟁을 꺼린 나머지 동료보다 부하를 증원하려는 심리
② 업무배증의 법칙: 지시 · 보고 · 감독 등 파생적 업무를 만들어 내려는 심리



02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2022 선행정학 p.45

01 중요도 ▬▬□ 난이도 ▬▬□ 2011 서울9급 등 총6회

진보주의 정부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자유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 규제 강화 강조
③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강조
④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⑤ 소외집단을 위한 정부정책 선호

유제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9급

① 조세 감면 확대 ② 정부규제 강화
③ 소득재분배 강조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출제분석

진보와 보수의 본질을 묻는 문제로 꾸준히 빈출되고 있다.

정답 · 해설 답 ① 유제 ①

소극적 자유(정부로부터의 자유) 선호는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다. 진보주의 정부는 적극적 자유(정부에로의 자유)를 추구한다.
↳ 자유를 열렬히 옹호

02 중요도 ▬▬□ 난이도 ▬▬□ 2017 교행9급

정부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불신하지만 정부를 신뢰한다.
② 진보주의자는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③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중요시되었다.

정답 · 해설 답 ②

진보주의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므로 누진세 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선호한다.

☑ ① [×]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불신하고 자유시장을 신뢰한다.
③ [×]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④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최대의 정부(큰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으로 행정국가가 등장하였다.
↳ 큰 정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부관

구분	진보주의(좌파) – 큰 정부론	보수주의(우파) – 작은 정부론
인간관	①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 있는 인간 ② 경제인관 부정	① 오류의 가능성 없는 인간 ②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관 (자유 · 평등 · 공익)	① 자유를 열렬히 옹호(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로의 자유) ②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③ 배분적 정의(부의 공정한 분배) ④ 공익의 실체설(공동선, 시민의 미덕)	① 자유를 강조(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②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③ 교환적(평균적) 정의(거래의 공정성) ④ 공익의 과정설(개인의 자유)
시장관	①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②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에 의해 치유가능	①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②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
정책관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선호 ② 공익목적의 정부규제정책 ③ 조세증액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	①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선호 ②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③ 조세 감면 확대

01 중요도 ▬▬□ 난이도 ▬▭□ 2013 행정사 등 총5회

정책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ㄱ. 정책문제는 사익성을 띤다.
ㄴ. 정책문제는 객관적이고 자연적이다.
ㄷ. 정책문제는 복잡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ㄹ. 정책문제는 정태적 성격을 갖는다.
ㅁ.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ㄷ, ㅁ

출제분석
정책문제가 정의되는 과정의 속성을 묻는 단순한 문제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 해설 답 ④

ㄷ, ㅁ만 옳다.

☑ ㄱ [×] 정책문제는 공익성을 띤다.
ㄴ [×] 정책문제는 주관적이고 인공적이다.
ㄹ [×] 정책문제는 동태적 성격을 띤다.

정책문제의 속성

① 정치성 : 정치적 투쟁, 협상, 타협이 전개되므로 객관적 합리성이 제약된다.
② 주관성 : 이해관계, 가치관, 능력, 심리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③ 인공성 : 이해집단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과정이므로 객관성 · 합리성이 제약된다.
④ 동태성 : 여러 문제와 얽혀 있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복잡다양성 또는 상호의존성).
⑤ 역사성 : 정책문제는 역사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⑥ 공공성 : 정책문제는 공익과 직결된다.
⑦ 차별적 이해성 :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의 이해가 엇갈린다.

02 중요도 ▬▬□ 난이도 ▬▬□ 2010 경정승진

문제의 구조화과정에서 범하는 세 가지 오류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에 적절한 것은?

문제의 정의나 구체화에서 공통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 오류라 한다. 이것은 문제의 구조화를 잘못해서 틀린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오류이다. 맞는 귀무가설을 배제하는 것을 (㉡)라 하고,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라 한다면,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 오류인 것이다.

	ㄱ	ㄴ	ㄷ
①	제1종오류	제2종오류	제3종오류
②	제1종오류	제3종오류	제2종오류
③	제3종오류	제1종오류	제2종오류
④	제3종오류	제2종오류	제1종오류

공공셤 팁
"1종오류 = 옳은 귀무가설 기각"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③

㉠은 제3종오류, ㉡은 제1종오류, ㉢은 제2종오류에 각각 해당한다.

정책오류의 유형

옳 옳귀기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틀린 귀무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오류
틀린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옳은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	

04 정책목표

2022 선행정학 p.213

01 중요도 ▬▬□ 난이도 ▬▬□ 2019 서울사복9급 등 총6회

조직목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를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② 목표의 다원화는 조직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기존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③ 목표의 확대는 본래 조직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④ 목표의 승계는 본래 조직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때 기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유제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2017 국가7급

① 목표 대치(displacement) ② 목표 확대(expansion)
③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④ 목표 승계(succession)

출제분석

목표의 변동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해 두어야 하는 문제이다. 가끔 응용되어 출제되기도 한다.

궁금쌤 팁

목표의 전환, 승계, 추가(다원화), 확대를 구분해서 사례까지 알아 두어야 해요.

정답 · 해설 답 ② 유제 ①

②만 옳다.

☑ ① [×]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③ [×] 목표의 승계에 해당한다.
④ [×]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목표의 확대에 해당하며, 목표의 승계는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목표의 변동 유형

목표의 전환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는 목표의 대치, 전도(과두제의 철칙 등)
목표의 승계	목표가 기달성 또는 불가능시 새로운 목표 설정
목표의 다원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는 것
목표의 확대	목표달성이 낙관적일 때 목표를 높이는 것
목표의 비중 변동	목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목표의 종결	목표 달성시 목표 폐지

02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가9급 등 총3회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답 ④

조직목표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의미하며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조직목표의 기능

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②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
③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또는 척도
④ 구성원의 응집성 · 일체감 확보로 동기부여 및 통합 · 조정 촉진

02 공무원의 보수

2022 선행정학 p.554

01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국가7급 인사조직론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 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민간의 임금수준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 해설 답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민간의 임금수준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① [ㅇ]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46조).

③ [ㅇ] 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46조).

④ [ㅇ]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공무원 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요인

경제적 요인	상한선 결정요인(민간임금, 국민담세능력, 정부지불능력, 물가수준, 재정경제정책 등)
사회윤리적 요인 [1]	하한선 결정요인(모범적 고용주로서 생계비 지급 의무)
부가적 요인	연금, 휴가 등 후생복지
정책적 요인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단(성과급 등)

1)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민간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02 중요도 ▬▬■ 난이도 ▬▬▭ 2016 사복9급 등 총6회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출제분석

5대 보수제도의 종류별 개념을 묻는 문제로 빈출된다. 특히 직무급과 직능급의 차이에 유의하자.

합격생 팁

①은 "직무"라는 표현을 보고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답 · 해설 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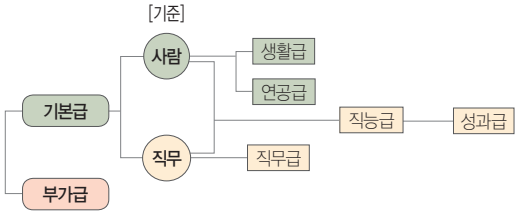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는 직능급이 아니라 직무급에 해당한다.
↳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보수

☑ ② [ㅇ] 성과급은 근로(노동)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이다.

③ [ㅇ] 생활급은 생계비를 지급하는 보수로 공무원의 연령과 가족이 기준이다.

④ [ㅇ] 연공급은 근무연한과 연공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이다.

보수구조 및 개별보수체계



	보수	지급기준	세부기준
생활보장의 원칙	생활급	생계비	연령 · 가족
	연공급	연공	근무연수
근로대가의 원칙	직무급	직무	노동(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가치
	직능급	능력	노동력(직무수행능력)의 가치
	성과급	성과	근로성과의 가치

11 중요도 ▬▭□ 난이도 ▬▬□ 2013 국가7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 공무원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 · 해설 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이다.

☑ ①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③ [×]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④ [×] 현업관서 우정노조에 가입되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등은 제외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1998)
구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 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 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10년 경력 미만의 외무직, 경감 이하 경찰,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 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는 우정 등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 · 감독직 공무원 , 인사 · 예산 · 경리 · 물품 출납 · 비서 · 기밀(국정원 등) · 보안 · 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교정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기능	①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③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사항 ④ 기타 당해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공무원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 비교(2021.7.6. 시행)

직종		공무원 노조	직장협의회
일반직		전직급	6급 이하
별정직		전직급 상당	6급 이하 상당
특정직	외무	O(전직급)	O(10년 경력 미만)
	경찰	X	O(경감 이하)
	소방	O(전계급)	O(소방경 이하)
	교육	O(교원제외)	X
퇴직자		O	X

주의 [공무원노조 실질적 가입 범위]

원칙 : 직급 제한 X(2021.7.6. 시행)

실질 : 지휘 · 감독직 가입 불가

∴ 실 · 국장 · 과장, 기관장 등 대부분의 4급 이상은 여전히 가입 불가능

19 중요도 ▬□□ 난이도 ▬■□ 2010 서울9급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행하는 것은?

① 행정정보 공동활용 ② 전자문서교환
③ 전자민원처리 ④ 전자정보공개

정답 · 해설 답 ②

다른 조직간에 정형화된 표준양식(약속된 포맷)을 사용하여 행정상의 거래를 컴퓨터간에 상호 행하는 것은 전자문서교환(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back office 후방 (내부)	EDI	전자자료 교환체제	정형화된 포맷을 이용, 컴퓨터간 정보 · 자료를 교환하는 체제 – 문서없는 행정
	ES	전문가 체계	인공지능의 응용으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여 컴퓨터에 미리 기억시켜 둠으로써 의사결정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하는 휴리스틱한 컴퓨터장치
	DSS	의사결정 지원체제	컴퓨터와의 대화식 시스템으로서 비구조적인 상위관리층의 업무, 즉 비정형적(비구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의 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모형을 조작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한다. DSS는 통계적인 분석패키지를 통하여 문제의 일부만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의사결정자의 경험과 판단에 맡긴다.
	ITA	정보기술 아키텍처	① 정보자원(정보,기술, 시스템, 인력, 예산)간의 관계를 연결 · 정리한 설계도(밑그림) ②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입
	GRM	정부참조 모형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각 기관의 아키텍처 수립 시 참조하는 추상적 모형
	IRM	정보자원 관리	정보자원(시스템, 자료,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제
front office 전방 (외부)	US	보편적 서비스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접속 가능할 것을 기본속성으로 한다. 접근성(Access), 활용가능성(Usability), 훈련과 지원(Training & Support),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등을 요소로 한다.
기타	CRM	고객관계 관리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조직, 인력, 프로세스를 정비 · 운용하는 고객지향적 IT전략으로 정부부문에서는 PCRM(정책고객관계관리)라고 한다.

20 중요도 ▬■■ 난이도 ▬■□ 2015 국가9급(수정) 등 총5회

정보화와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부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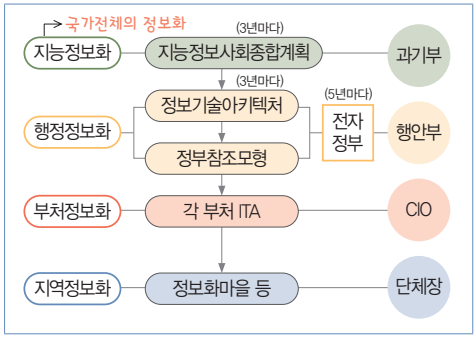
④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영상회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이다.

중규쌤 팁
"지능정보화(구 국가정보화)"인지, "행정정보화"인지 잘 보세요.

정답 · 해설 답 ②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구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며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보화 업무 소관체계



주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2021.6.10.시행)되면서 국가정보화기본계획(매 5년)이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매 3년)으로 변경되었다.

7급용

22 중요도 ▬▭□ 난이도 ▬▬■ 2019 지방7급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 · 활용하며,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자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전자정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기관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 ① [ㅇ]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5조).

② [ㅇ]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매년 6월24일을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의3).

④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4조).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3년
전자정부 기본계획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주의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

- 지능정보사회종합계획 : 매 3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자정부기본계획 : 매 5년(행정안전부장관)
- 정보기술아키텍처기본계획 : 매 3년(행정안전부장관)

23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국가9급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유제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2017 지방9급

① 속도(velocity) ② 다양성(variety)
③ 크기(volume) ④ 수동성(passivity)

정답 · 해설 답 ③ 유제 ④

빅데이터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은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볼륨(Volume)이다. 3V

☑ ① [ㅇ] 전자거버넌스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② [ㅇ]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웹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④ [ㅇ] 지역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빅데이터의 3대 특징

善 3V

다양성 (Variety)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보
속도 (Velocity)	시간에 민감, 실시간 라이브형태 즉,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
크기 (Volume)	대형의 방대한 정보

0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022 선행정학 p.780

01 중요도 ■■■ 난이도 ■■□ 2012 지방9급 등 총7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④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출제분석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반을 묻는 문제로 최근 빈출되고 있는 형식이다.

합격생 팁

사법권은 무조건 자치권에 포함 안 된다는 생각만 했어요.

정답 · 해설 답 ④

자치사법권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일반적으로 자치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① [ㅇ] 집행기관(수장) 중심(우위)의 기관대립형임

② [ㅇ] 모든 자치단체는 법인임(「지방자치법」 제3조)

③ [ㅇ] 주민감사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6), 주민소환제(2007)를 도입 · 실시하고 있음

02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교행9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를 두고 있다.

② 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둔다.

④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답 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는 현재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시만을 둘 수 있고, 특별자치시에도 군과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다(「지방자치법」 및 「세종시법」).

☑ ② [ㅇ] 「지방자치법」 제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③ [ㅇ]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 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 · 면 · 동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조).

④ [ㅇ]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주의 [특별자치시 안에 기초단체를 둘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세종시법]
종래(2022.1.13. 이전)	ㅇ	×
현재(2022.1.13. 이후)	×	×

참고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중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01 중요도 ▬▬□ 난이도 ▬▬□ 2013 서울7급

라이트(D.S.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립형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간 경쟁 관계를 유지한다.
② 포함형은 정부간 관계의 이상적 모형으로 간주된다.
③ 포함형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정부간 상호 의존 관계이다.
④ 중첩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경우이다.
⑤ 분리형은 재정과 인사 등의 독립적 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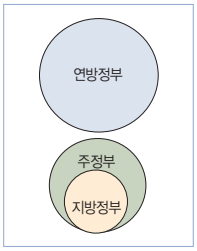
정답 · 해설 답 ⑤

분리권위형(조정권위형)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 · 인사 등에 있어서 완전하게 분리 · 독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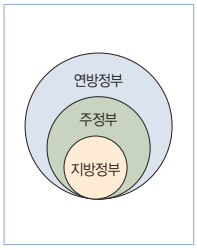
☑ ① [×] 대립형은 Wright가 제시한 모형이 아니라 Nice가 제시한 모형이다. Wright는 분리(조정)권위형, 포함(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 가장 이상적이고 실천적인 모형은 포함형(내포형)이 아니라 중첩형이다.
③ [×] 포함형(내포형)이 아니라 중첩형에 대한 설명이다.
④ [×] 중첩형이 아니라 포함형(내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Wright의 IGR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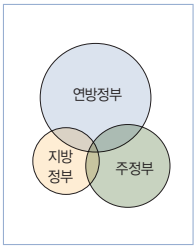
(1) 분리권위형(조정권위형)



(2) 포괄권위형



(3) 중첩권위형



02 중요도 ▬▬■ 난이도 ▬▬□ 2011 서울7급 등 총4회

정부 간 관계에 대한 라이트(D.S.Wright)의 설명 중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며,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는 모형은?

① 조정-권위모형 ② 포함-권위모형
③ 중복-권위모형 ④ 동반자모형
⑤ 대리인모형

출제분석
IGR(정부간 관계론)을 물을 때 출제되는 대표적인 빈출문제이다.

공군셀 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이상적 모형은 중첩권위형이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정답 · 해설 답 ③

D.Wright(1988)는 정부 간 관계를 조정권위형(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중첩(중복)권위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부 기능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의존적인 관계로 보지만 어디까지나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이 모형은 각 정부가 단일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고 상호 간 재정적 협력과 원조는 물론 정부 간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다.

☑ ① [×] 조정권위형(Coordinate Authority Model)은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안되므로 갈등발생 시 조정이 필요하다.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조정권위형 (Coordinate Authority Model)	분리형, 분리권위형(Separated Authority Model)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는 독립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시정부) 간의 관계는 포괄적 권위모형에 해당한다. ⇨ 이원적 관계모형
포괄권위형 (Inclusive Authority Model)	내포형, 포함형이라고도 하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 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속관계이다.
중첩권위형 (Overlapping Authority Model)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이다. 가장 이상적인 실천적 모형이다.

05 중요도 ▬▭□ 난이도 ▬▬□ 2008 군무원9급 등 총2회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제도 중 사후적 재정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재정분석진단제도
③ 재정투자심사제도 ④ 기채승인제도

유제1

지방재정의 사전예산관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①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② 지방재정투융자심사
③ 성별영향평가제도 ④ 지방채 발행

유제2

지방재정의 사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서울7급

ㄱ. 중기지방재정계획	ㄴ. 지방재정투자심사
ㄷ. 행정사무감사	ㄹ. 성인지 예산제도
ㅁ. 재정공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제도

	소극적	적극적
사전적	① 재정정보공개제도 (예산편성안 및 예산공개) ② 성인지예산제도 ③ 재정투자심사제도	① 주민참여예산제도 ② 주민투표제도
사후적	① 재정정보공시제도 (예결산정보 공개) ② 예산감시운동 ③ 성인지결산제도 ④ 재정진단 등 재정위기관리제도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① 주민(납세자)소송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행정사무감사제도 ④ 주민소환제도

주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의 성격]

- 사후적 재정관리제도 ○, 사전적 재정관리제도 ×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

정답 · 해설 답 ② 유제1 ① 유제2 ③

재정진단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 · 비권력적 통제장치로서 1994년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다.

☑ 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안부장관이 작성 ·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작성 · 운용하는 중장기 재정운영지침서으로서 사전통제수단이다.

③ [×]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선정되고 투자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로서 중앙정부가 국가계획과의 연계한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진단제도가 사후적 통제장치인데 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사전적 통제장치에 속한다. 또한 과거 행정안전부장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기채승인제도 등이 권력적 통제장치인데 반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비권력적 통제장치이다.

④ [×]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제는 사전통제수단이다. 다만 현재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예산편성지침제도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재정투자심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진단제도
권력적 통제 1)		비권력적 통제		
사전적 통제				사후적 통제

1) 지방정부의 재정자주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권력적 통제장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 침제도 및 지방채발행승인제도)는 2006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절차

善 진주위급

- 재정진단 대상단체 — ① 채무비율 · 잔액과다 ② 세입실적의 현저한 감소 ③ 경상비비율 과다
- 재정주의 단체 —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하진 않으나 재정건전성 또는 효율성이 저하된 단체
- 재정위기 단체 — 재정위험수준이 심각한 단체
- 긴급재정관리단체 (대안적 파산제) — ① 위기단체 지정 후 3년 경과 ②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 ③ 채무원리금 60일 이상 미지급

05 중요도 ▬▬□ 난이도 ▬▬□ 2016 국가7급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ㄷ.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최근 각종 청구 · 투표의 제외대상이 부쩍 빈출되고 있습니다.

정답 · 해설 답 ④

ㄱ, ㄴ, ㄷ 모두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조례 개폐청구 제외대상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06 중요도 ▬▬□ 난이도 ▬▬□ 2014 지방7급

우리나라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개정(2022.1.13. 시행)으로 중요한 숫자가 많이 달라졌으니 주의하세요.

정답 · 해설 답 ①②

300명 → 200명(개정「지방자치법」)
개정「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의 연서인원은 500명이 아니라 200명 이상이다. 연서인원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00명, 인구 50만 이상은 200명, 기초자치단체는 150명 이상이다. 청구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 ② [×] 감사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함(개정「지방자치법」제21조). 출제 당시에는 2년이었으나 2022.1.13. 이후에는 3년이다.
③ [○] 청구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1조).
④ [○]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개정「지방자치법」제21조).

개정「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주의 [주민감사청구제도 개편]

	종래	개편
청구연령	19세 이상 주민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연대서명 인원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① 시 · 도 :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③ 그 밖의 시 · 군 · 자치구 : 200명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① 시 · 도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③ 그 밖의 시 · 군 · 자치구 : 150명
청구시효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부록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비교정리

[2022.1.13. 시행]

내용		종전	개정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둠 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① 지방자치법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도록 함 ② 세종시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에 군과 자치구를 두지 않음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화		일률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도록 함 (기관대립형)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단체장 선임방법 등 포함)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만 규정되어있을 뿐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규정이 없었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규정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 자기 책임하에 종합처리
자치단체의 사무 예시규정 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삭제됨
주민조례개폐청구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		법적 근거 및 청구절차,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법적 근거만 남기고 청구권자, 청구대상,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규칙 제 ·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제도 없었음	주민은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 폐지 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감사청구연령	19세 이상 주민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연대서명인원 축소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 · 도 :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③ 그 밖의 시 · 군 · 자치구 : 200명	다음 인원이내 조례로 정한 수 이상 ① 시 · 도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③ 그 밖의 시 · 군 · 자치구 : 150명
	감사청구시효 연장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3년
	공표와 열람	규정 없었음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감사청구내용을 청구받은 받은날부터 5일 이내 공표하고 공표일부터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
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 재무 등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신설		규정 없었음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규정 없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한 기관 · 단체 또는 서무위탁을 받은 기관 · 단체 등으로 겸직금지 대상기관 명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 교육 · 훈련 · 복무 ·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폐치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권자 규정		규정 없었음	자치단체 폐치분합시 최초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 사무국장 · 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규정 없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시 · 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없었음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기초단체장의 명령 ·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 ·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 · 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 ·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 · 처분에 대한 취소 ·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시 · 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외에는 특례규정이 없었음	① 기존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기존 특례 뿐 아니라(특례는 법률로 정함) ②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함(특례는 법률로 정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 군 · 구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함(특례는 법률로 정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		특별자치단체를 인정만 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었음	특별자치단체의 성격과 설치절차, 규약 등 구체적 규정 신설 ① 성격 : 법인 ② 설치 :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 ③ 기관 :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둠(조직 · 운영 등은 규약으로) · 지방의회 : 구성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성(겸직 가능) · 특별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서 선출(단체장이 겸직 가능) ④ 설립과 해산 : 행안부장관이 설치 · 해산을 권고할 수 있음 ⑤ 경비 : 구성 자치단체가 분담

기출은 미래다
10년기출을 정제한

김중규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기출문제는 흘러간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기출문제 정복 없이는 절대 고득점이 불가능하다. 9/7급 등 모든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나올 기출문제만 엄선·정제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학 통합 기출문제집

대한민국 대표 행정학 김중규

·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 과정 수료
·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 ·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 성균관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 ·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 現 KASPA 대표교수 · 現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2판 2021년 6월 29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87870-85-2
ISBN 979-11-87870-84-5(세트)
값 42,000원 (전3권)